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1.15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고환율 악용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 집중 점검 착수 p.1
- 02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p.2
- 03 관세 리스크, 사전에 막는다! 관세청 '안심 플랜' 출범 p.3
- 04 KOTRA, 중국 수소산업 고성장에 "한·중 기업 협력 기회도 증가할 것" 전망 p.5
- 05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통한 '납기 연장·분할납부' 비대면 신청 개시 p.7

1 고환율 악용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 집중 점검 착수

세관 신고와 실제 외화 거래 불일치 기업 1,138곳 대상 정밀 검사

관세청이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환 검사의 칼날을 매섭게 세우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은행을 통해 오고 간 외화 자금 내역 간의 불일치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포함 1,138개사 우선 점검... '사각지대' 없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총 1,138개 기업이 우선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424곳, 대기업 62곳 순이다.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 자료를 정밀 대조하여 불법 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지난해 실시된 외환검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점검 대상 104개 기업 중 무려 97%에 달하는 기업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 총액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법인에서 수령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 지사의 부채 상환에 무단 사용한 경우, ▲해외 홍보비를 게임머니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하며 외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수출대금 미회수 및 재산 도피 집중 단속"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은 환율 불안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통관·재무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핵심"

전문가들은 관세청의 검사망이 촘촘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조언한다.

우선 기업들은 세관 신고 금액과 실제 외화 입·출금 내역에 차이가 없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법인이나 지사를 통한 거래가 본사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관 담당자와 재무·외환 담당 부서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 가능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대폭 강화, 이용자 불편 완화 위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가능**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도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해결과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부호 변경을 포함한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 외 사용자들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에 따른 순차적 정보 변경 대상자에 포함돼 적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원활화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따라서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 등록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해외직구 물품통관 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3 관세 리스크, 사전에 막는다! 관세청 '안심 플랜' 출범

품목분류·과세가격 사전점검 강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관세청이 사후 추정 대신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단축, 가산세 감면 등 고액 추정을 예방하는 6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 안심 플랜'을 12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각종 사전점검 제도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기업이 관세 신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중심 행정 패키지다.

'관세 안심 플랜'은 품목분류(HS), 과세가격, 원산지, 환급,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등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정과 이에 따른 경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다.

우선,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 적용해 신속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 물품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10%)를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기업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검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세사·회계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 심사로 전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도 확대된다.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아울러 환급금 지급 심사와 서류 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한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자율 점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해, 일시에 고액 추정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

3 관세 리스크, 사전에 막는다! 관세청 '안심 플랜' 출범

품목분류·과세가격 사전점검 강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FTA, 외국환거래, 해외 직구까지 관세행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복잡한 품목분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푸드, K-뷰티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품목분류 가이드북'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차전자,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관세 안심 플랜 6대 개선 플랜	12대 세부 과제
플랜 1 : 품목분류 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품목분류 활성화	① 품목분류 FAST-TRACK 확대 ② 시제품 등 품목분류 활성화
플랜 2 : ACVA 결정 업체에 대한 안정적 기업 경영 지원	③ ACVA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제외 ④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플랜 3 : AEO 기업의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지원	⑤ AEO 기업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활성화 ⑥ 통관적법성 심사기간 단축·서면심사 등 혜택 부여
플랜 4 :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⑦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자진신고시 가산금액 경감 ⑧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기업에 대한 신속환급 지원 및 관세조사 감소화
플랜 5 :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정보제공 확대	⑨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을 통한 자율점검기간 연장 ⑩ 납세신고도움정보 정보제공 내용 확대
플랜 6 : 브랜드 홍보 강화 및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⑪ 관세 안심 플랜 통합 홍보 추진 ⑫ 성실신고·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세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후 추징에 대한 불안이 해소돼 안정적인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안심 플랜 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을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4

KOTRA, 중국 수소산업 고성장예 “한·중 기업 협력 기회도 증가할 것” 전망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기업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 중 수소산업 협력 유망분야 및 진출 시 유의점 제시

중국이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전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무역투자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월 13일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기업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소산업 정책 동향과 시장 전망, 협력 유망분야 및 진출 시 유의점 등을 제시했다.

중국 수소산업은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하며 2024년 말 기준 중국 수소 생산과 소비 규모는 3,65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수고 연료전지 차량 보급 및 수소 활용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대규모 수소 산업생태계 및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어 연료전지, 수소차, 핵심소재 관련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한·중 수소기업간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소산업 부품 및 장비 주요 8종 수입액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5억 5,000만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막전극 접합체와 순환 펌프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2년 연속 늘어나는 등 수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KOTRA, 중국 수소산업 고성장에 “한·중 기업 협력 기회도 증가할 것” 전망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기업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 중 수소산업 협력 유망분야 및 진출 시 유의점 제시

<중국 수소산업 주요 장비부품 대한민국 수입 동향>

연번	분류	품목명	제품 설명	HSCODE (중국 세관 기준*)	2024년 對韓 수입액 (백만불), 전년比 증감	2024년 對韓 수입액 비중
1	연료전지	막전극 집합체	연료전지용 분리막, 촉매, 확산층 등	85030090	97 (+10%)	14.4%
2	연료전지	순환 펌프	수소 연료 전지용 순환 펌프	84148090	3 (+15%)	2.2%
3	연료전지, 충전소	고압 압축기	수소충전소용 압축기	84148049	36 (+8%)	3.3%
4	충전소	고압 밀봉 밸브 (감압 가능)	충전총·밸브 조립체	84811000	42 (+30%)	8.6%
5	충전소	고압 밀봉 밸브 (감압 불가)	충전총·밸브 조립체	84818040	244 (+4%)	8.3%
6	충전소	고압 수소 저장탱크	충전소용 저장 용기	73110090	37 (+56%)	46.2%
7	충전소	농도 센서	안전 감지 센서	90271000	50 (+19%)	6.9%
8	충전소	압력 센서	고압 감지 센서	90262010~ 90262090	48 (+1.3%)	3.2%

* HS 코드는 수소산업 외 타 산업에 통용되는 품목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 KOTRA>

보고서는 중국 수소시장 진출 기업이 제도와 기술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의 전해조, 수소 시스템 안전 및 표준 체계, 현지 프로젝트 입찰 시 자격요건, 중국기업과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소개하며 다층적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OTRA 황재원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수소산업은 정책기반과 시장규모를 동시에 충족하는 성장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 기술 경쟁력이 중국의 대규모 실증 환경과 결합하면 글로벌 수소 시장으로의 확장 협력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포털(<https://dream.kotra.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5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통한 '납기 연장·분할납부' 비대면 신청 개시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 2026년 세정지원 대상 기업 대폭 확대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점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UNI-PASS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성 > 담보/제세 납부'에서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 2025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2025년 11월 말 기준					합계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업체수(개사)	106	733	601	471	10	1,921
금액(억원)	444	6,076	257	8,593	-	15,370

올해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확대됐다.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기업 3,657개사와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104개사를 추가해 총 3,861개 기업이 추가됐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2,000여 개 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